

공수처법 이견...여야4당 패스트트랙 물 건너 가나

민주·바른미래 합이 또 실패
수사·기소권 분리 놓고 대립
김관영 “더이상 논의 없어”
심상정 “노딜은 최악의 선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 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주 어떤 협상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24일 현재 패스트트랙 협상 최대 걸림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개혁의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만나 공수처 설치법안 내용에 대해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고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안을 수용하면 의원총회로 가져가 다시 패스트트랙 공조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3가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패스트트랙 성사의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3가지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애초 민주당이 원했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서 상당수 탈어낸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그 설립 취지까지 훼손할 수 있는 안으로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철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절대 안 된다”며 “검찰과 동일한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직의 부패를 막자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고 받기

어려운 안을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해도 선거 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급물살을 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 수용을 전제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인지 저희 당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추진받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협상이 주춤거리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권·기소권을 통합할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유·안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지 그 맥락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대구 칠성종합시장 찾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칠성종합시장을 방문, 채소를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내홍속 안철수 6월 복귀설 솔솔

정계개편 시발점 주목
安 귀국 신당 창당설도

바른미래당 창당 주역인 안철수 전 의원의 6월 조기 귀국설이 정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안 전 의원의 귀국은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의도에선 안 전 의원의 일부 측근이 국회 앞 사무실을 얻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안 전 의원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며 “안 전 의원 부인 안신년 등을 감안하면 귀국한다고 해도 올 가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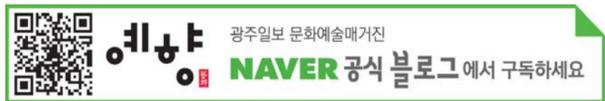
하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두고 또 한 번 분란을 겪은 바른미래당 내에선 ‘안철수 조기 등판론’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번 패스트트랙 내용이 ‘당’이 내년 총선까지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위기감으로도 연결될 만큼 안 전 의원

이 재등장해야만 내년 총선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또다시 저조할 경우 이런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계’로 분류된 김성식 의원이 오는 6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안 전 의원의 6월 귀국설에 힘을 보탠다.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또다시 신당을 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4·3 재보궐 선거와 선거법 패스트트랙 결과에 따라 안 전 의원의 조기 등판 여부가 결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견딜 수 없어 깊어질 경우, 안 전 대표를 겪은 바른미래당 내에선 ‘안철수 조기 등판론’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번 패스트트랙 내용이 ‘당’이 내년 총선까지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위기감으로도 연결될 만큼 안 전 의원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때 모습 그대로...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 복원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28일 복원계획 대국민 설명회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이 원형 복원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옛 전남도청 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 계획 대국민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은 조선대 산하협력단(책임연구원 김재형)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을 발표한다. 복원될 6개동 건물은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도 경찰국·민원실, 상무관이다.

복원 기본 계획은 건물 6개동을 당시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현 건물 불발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여부,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을 고려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



에 근거하는 복원 ▲5·18민주화운동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는 복원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원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상생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5·18 당시 주요 활동 거점이

있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자리한 도청 본관 1층 서무과, 수습대책위원회가 있던 2층 부지사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철거해 당시 모습을 복원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주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는 도청별관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1~2층은 전담 통행로로 활용하고 3~4층만 복원한다.

무기고와 시민군의 휴식과 식사공간이었던 도청 회의실은 설비공간을 그대로 두고 내부 공간을 복원하며, 상무관은 외형 변화가 거의 없어 내부 바닥재만 교체한다. 중간이 사라진 도 경찰국과 도 경찰국 민원실은 각각 3층, 2층으로 층을 나누어 복원하고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도 경찰국 및 도 경찰국 민원실 간 연결통로는 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6개동의 전시 콘텐츠 구성과 공간 활용을 위한 전시 기본계획을 발주해 공간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18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80년대 당시의 역사적 상징성 있는 6개 건물의 주요 공간을 재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오는 22년 복원 완료를 목표로 복원 공사를 자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옛 전남도청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산 역사의 현장으로 전시와 교육,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